헌재 “국회 측에 ‘尹탄핵 사유’ 내란죄 철회 권유 안해”

“변론기일 5회 일괄지정은 헌재법 근거…필요시 추가”
“사유 변경 명문 규정 없어…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진행 과정에서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라고 국회 측에 권유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에 여권 일각에서 헌재가 예단을 비친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제기되자 헌재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한 셈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6일 오후 정기브리핑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이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헌재 권유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맞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지난 3일 열린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 소추 사유 가운데 형법상 내란죄 해당 여부를 쟁점에서 빼겠다고 했다. 내란 행위의 존부는 계속 다투되, 구체적인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를 엄밀히 따지기보다 헌법 위반 여부에 집중해 심리를 서두르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소추는 잘못된 것”이라며 내란죄를 제외하려면 탄핵 소추안을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내란죄는 탄핵 사유의 핵심이었음에도 재판부가 직접 철회를 권유했다”며 “‘탄핵 인용’이라는 예단을 내비친 것”이라고 문제 삼기도 했다.

천 공보관은 내란죄 위반을 소추 사유로 볼지 이날 열린 재판관 회의에서 논의했느냐는 질의에는 “따로 전달받은 사항은 없다”며 “소추 사유를 어떤 연관관계에서 법적으로 고려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판단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탄핵소추 사유 변경시 국회 재의결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해당 부분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다”며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지난 3일까지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이달 14일과 16일, 21일, 23일, 2월4일까지 총 5차례의 변론기일을 미리 지정했다. 5회 변론기일의 심리 경과를 보고 추가 심리 여부를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천 공보관은 이에 대해 “재판부에서 당사자의 변론 계획 수립과 원활한 절차 진행의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근거는 헌법재판소법 제30조 3항,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제20조 1항이다. 형사소송 법령이 적용된 게 아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헌재의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반발하며 “헌재가 ‘재판장이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해 지정할 경우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형사소송규칙 제124조의2 조항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는데 이를 사실상 반박한 셈이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정계선·조한창 신임 재판관 임명으로 재판관 ‘8인 체제’가 구성된 이후 첫 재판관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이 지난 3일 준비절차 종결 상황을 보고하고 전원재판부가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고 천 공보관은 전했다.

또 재판관 8명이 일치된 의견으로 변론 기일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진행하고 평의는 매주 1회 진행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데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변론기일을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의 헌재 출석 시 경호 사항과 체포 가능성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밝힐 단계가 아니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버스로 막힌 대통령 관저 내란 수괴(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가 버스들로 가로막혀 있다. /연합뉴스

경찰에 ‘尹체포’ 넘기려다 철회한 공수처…혼선만 가중

‘떠넘기기’ 비판도…영장집행 역량·전문성 부족 인정한 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기려다 하루 만에 경찰의 거부로 철회하면서 혼선이 빚어졌다.

공수처가 위험 부담이 따르는 체포영장 집행은 경찰에 떠넘기고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만 가져가려다 수사 과정의 혼란만 키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수처는 6일 오전 “경찰의 영장 집행 전문성과 현장 지휘체계 통일성을 고려해 어젯밤(5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경찰 국수본은 내부적 법률 검토 결과 공수처가 보낸 공문에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고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나가겠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공수처가 이날 오후 “공조수사본부 체제하에서 경찰과 잘 협의해 체포영장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시 밝히며 영장 집행 일임 결정을 철회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그러나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전체를 이첩하지는 않으면서 대통령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 등 위험부담이 높은 영장 집행만 경찰에 떠넘기려 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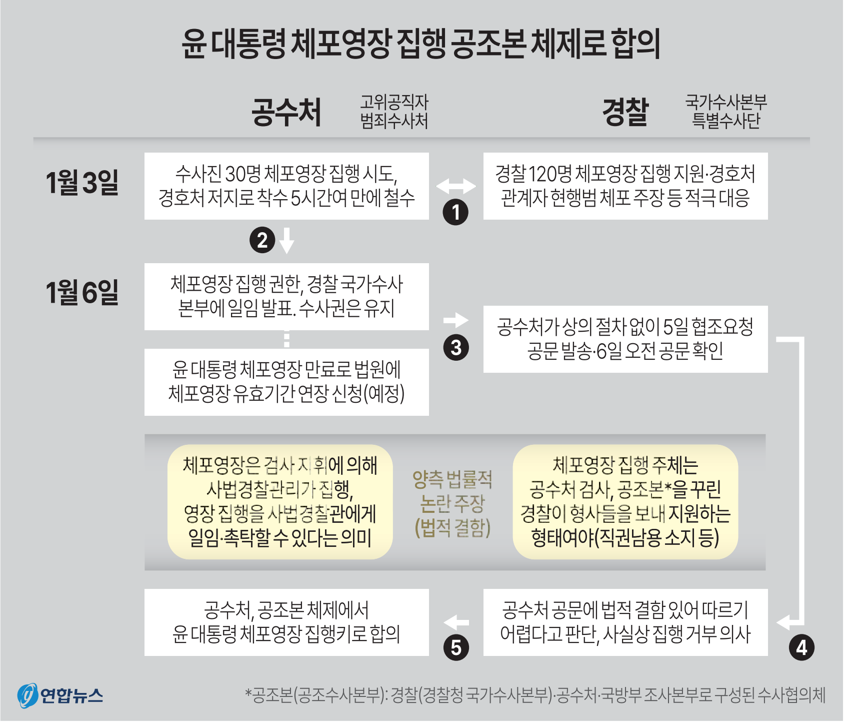
공수처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자체적인 영장 집행 능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경찰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기도 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기껏해야 50명인 검사·수사관 인력이 200명이 짠 스크럼을 어떻게 뚫겠냐”며 “영장 집행의 전문성은 공수처에 없고, 경찰의 인력·장비·경험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앞선 체포영장 집행 현장에서 박종준 경호처장 체포 여부를 두고 빚어진 경찰과 공수처 간 마찰이 사태의 발단이 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3일 영장 집행 당시 경찰 수사관 중 일부가 박 처장 등 체포를 저지하는 경호처 관계자들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으나 공수처는 물리적 충돌 우려 등을 이유로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과 2차 집행 시도 일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이같은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공수처가 집행 권한 일임을 결정해 통보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이처럼 영장 집행 과정에서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이 있었던 데다 ‘공수처가 성의 없는 모습을 보였다’는 국수본 관계자의 전언까지 알려지면서 가뜩이나 수사 의지와 역량에 대한 논란에 시달려왔던 공수처를 향한 비판 여론도 커지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공수처는 경찰이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와 달리 주요 관련자 소환조사나 신병 확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피의자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유일하다. 문 사령관도 애초 경찰 특별수사단이 소환 조사하다 검찰이 긴급체포를 승인하지 않으면서 공수처로 사건이 이첩됐다.

공수처 설립부터 수사까지 힘을 실어 왔던 야당에서마저도 공수처의 수사 의지와 능력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연합뉴스

55경비단 병사, 1차 인간띠부터 체포저지 동원

경찰, 33군사경찰경호대 동원도 확인…채증영상 속 ‘흑색패딩’ 통일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병사들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1차 저지선부터 동원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경호처가 그간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의무복무 병사들을 동원한 적 없다고 밝힌 것과 달리 경찰이 채증한 영상에는 이들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6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관저에 진입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수사관들이 처음 맞닥뜨린 1차 저지선은 경호처 직원 50여명과 군부대 인력 30-40명으로 구성된 ‘인간띠’였다.

경찰은 채증 영상 분석, 55경비단장 참고인 조사 등을 토대로 인간띠에 동원된 병력이 관저 울타리 경호를 담당하는 55경비단 소속 병사들인 것으로 파악했다. 채증 영상 속 병사들로 추정되는 군 병력은 계급장을 붙이지 않았고 모두 흑색 패딩과 모자, 마스크 등으로 복장을 통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는 그간 55경비단 동원을 부인하며 “공수처 도착 시 대치가 격화될 것을 대비해 경호처 직원들로 교체했고, 병사들은 후방 근무로 전환했다”고 밝혀왔다.

이는 55경비단 병사들이 최전선인 1차 저지선부터 동원됐다는 경찰 수사 결과와 배치되는 해명이다. 당분간 양측 진실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3차 저지선에서는 55경비단과 더불어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수방사 33군사경찰경호대 병사들도 동원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호처 직원, 33군사경찰경호대 및 55경비단 병사 등 200여명은 인간 띠를 만들어 벽처럼 늘어서면서 공수처 진입을 막아섰다. 33군사경찰경호대 병사들은 주변 경계 업무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관저투입 요청 불응, 항명이라 생각 안해”

경찰청장 직무대행 “적법 절차 근무 기조 유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 경찰을 투입해달라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의 요청에 응하지 않은 데 대해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항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의를 받자 이같이 말한 뒤 “항명이라 말하는 건 맞지 않고, 여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취지”라며 “현재 항명이다 아니다를 논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때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경호처 요청에 따라 이 직무대행에게 경찰의 관저 투입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일 최 권한대행과의 대화에 대해 이 직무대행은 “내밀한 통화 내용을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치안행정 여건 등에 대해 충분히 보고도 드리고, 일반적 사항을 질문하시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경호처에서 직접 연락받은 적이 있냐는 질의에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이 직무대행은 또 향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집행하게 될 경우와 관련해 “적법 절차대로 근무하겠다고 서울경찰청과 얘기한 상태”라며 “그런 기조를 유지하려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검찰,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속기소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계엄 사전 모의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문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6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문 사령관은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계엄 선포 이전 경기도의 한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정보사 소속 대령 2명과 함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한 정황도 포착됐다. /연합뉴스

민주, 崔권한대행 고발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윤석열 대통령이 질서를 파괴하고 왕이 되려 하다가 죄수의 길을 가게 됐는데 사태를 수습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 직무대행이 똑같이 질서 파괴 행위를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법원의 정당한 영장 발부에 따라 체포를 집행하는 데 대통령경호처가 무력을 동원해 저항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제지해야 할 직무대행이 오히려 지원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심각하게 직무대행의 질서 파괴·내란 행위에 대해 또 하나의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최 직무대행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힌 뒤 “법률위에서 자세한 검토를 하겠지만 아마 직무 유기와 관련한 것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진수 기자